

國內外經濟動向 및 勞動動向

韓國레미콘工業協會 總務部

1. '95 경제동향 및 임금동향

[1] 세계경제동향

- 90년 이후 경기침체로 2%대의 낮은 성장을 보인 세계경제는 94년(3.1%)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95년에는 성장률이 3.6%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다.
- 선진국의 경우 미국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 되겠으나, 일본 및 독일의 경기회복세가 본격화 되는데 힘입어 전체적으로 94년과 같은 수준의 2.7%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개발도상국은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5.6%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국권 등 체제전환국들은 마이너스성장이 대폭 축소되어 -1.0%의 성장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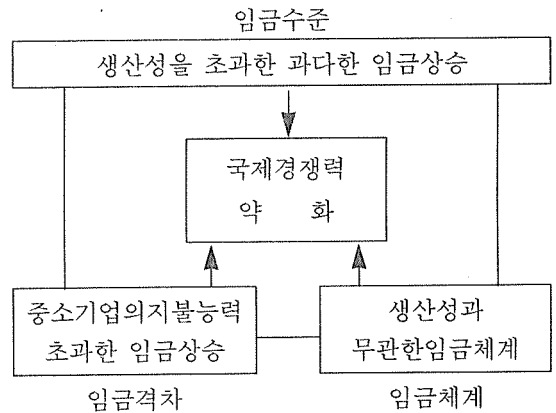
[2] 국내경제동향

- 95년 중 국내경제는 고율의 성장세를 실현하였던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연간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 및 수출증가율은 둔화되고 반면,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건설투자도 회복세를 나타내어 7.3%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수요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민간소비는 그동안 소득증대 등의 영향으로 94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견제세를 나타낼 전망이며, 증가율은 94년 중 급증에 따른 반사 효과에 기인하여 9.3%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이밖에 건설투자에 있어서는 건물건설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나 토목건설이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활기를 보여 94년(4.2%)보다 높은 7.5%내외로 늘어날 예상임.

[3] 우리나라 임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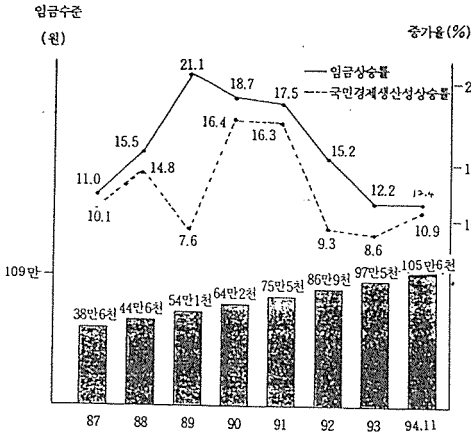
-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은 아래 [그림1]에서



[그림 1] 우리나라 임금의 문제점

볼 수 있듯이 임금수준, 임금체계 및 임금격차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

- 우선 임금수준 측면에서는 생산성을 초과한



자료 : 경 총
[그림 2] 임금수준 및 국민경제생산성 변화 추이

과다한 임금상승 문제가 기업의 지불능력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임금체계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생산성과 무관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고임금, 고기술, 저성장시대의 인건비 부담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임금격차 수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과다한 임금격차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인력확보를 위해 생산성을 초과하여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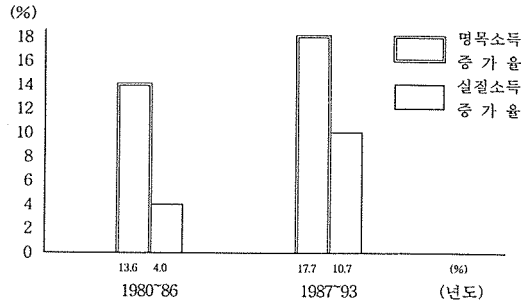
[표 1] 기업규모별 협약 임금인상률(1994. 12. 31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대상업체수	타결업체수	진도율	인상율
전규모	5,483	5,433	99.1	7.2
100~299인	3,862	3,822	99.0	9.1
300~499인	637	630	98.9	8.2
500~999인	531	529	99.6	7.6
1,000인이상	453	452	99.8	6.1

자료 : 노동부

다한 임금인상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약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 가구의 명목소득은 80~93년 기간중 6배 이상 증가 하였음.
- 이같은 근로자 가구의 소득증가는 가구당 취업인원수의 증가에도 어느정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가구주의 근로소득, 즉 임금상승이 높은 데 기인하는 것임.
- 87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경우 소득증가율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림 3]에서 보듯이 80~90년 기간 중 가구소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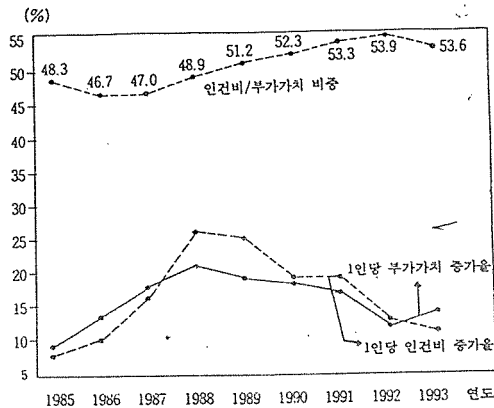
자료 : 경 총
[그림 3] 80~86년 대비 87~93년의 연평균 소득증가율

연평균 13.6% 증가 한데 반하여, 87~93년 기간 중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연평균 17.7% 증가 하였음.

[5] 기업의 지불능력

- 기업은 생산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부가가치에서 임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부가가치 증가보다 임금증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됨.
- 87년 이전에는 노동생산성 지표인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1인당 인건비 증가

율보다 높았고 따라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습.



자료 : 경 총
(그림 4)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 및 인건비 증가율(제조업)

중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경우 86년도에는 7.9%에서 89년에는 6.0%까지 하락하였고 그 이후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93년 현재 7.0%에 머무르고 있음.

- 경상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액 경상이익률의 변화는 더욱 확연한데, 86년 3.6%였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88년 호황기에는 4.1%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92년에는 1.5%에 그침으로써 불과 4년만에 1/3수준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냈습.
- 특히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94년 10월말 현재 중소기업 부도업체 수는 9,019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18.2% 증가하였으며, 부도금액면에서도 4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

(표 2) 1인당 인건비 및 부가가치 증가율(제조업)

(단위 : %)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인당 인건비 증가율	16.3	25.9	24.9	19.0	18.9	12.0	10.5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17.7	21.1	19.4	18.6	16.9	11.5	14.0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그러나 87년 이후 92년까지 매년 인건비 증가율은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 기간중 모든 수익성 지표가 모두 악화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
- 이와 같은 현상은 극심한 자금난과 급격한 임금상승, 인력난 등에 따른 원가부담이 그대로 제품의 가격에 전가됨으로서 단기내에 중소기업의 가격경쟁이 급속히 악화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3)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경상이익률

(단위 : %)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매출액영업이익률	7.9	7.2	6.8	6.0	6.5	6.6	6.6	7.0
매출액경상이익률	3.6	3.6	4.1	2.5	2.3	1.8	1.5	1.7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표 4] 중소기업 부도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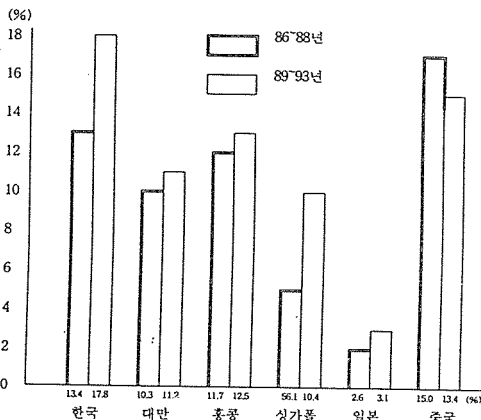
(단위 : %, 개, 억원)

구 분	1991	1992	1993	93.1~10월	94.1~10월
부 도 업체수	6,159 (49.8)	10,769 (74.8)	9,502 (△11.8)	7,633 -	9,019 (18.2)
부 도 금액	37,401 (136.8)	70,399 (88.2)	68,638 (△2.4)	47,457 -	70,095 (47.7)

자료 : 중소기업은행, 1995.1

[6] 임금과 국제 경쟁력

- 우리나라의 임금상승은 87년이후 급격히 이루어져 주요 경쟁국의 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86년~88년 기간중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은 13.4%로 중국(15.0%)을 제외한 대만(13.0%), 홍콩(11.7%), 싱가포르(5.1%), 일본(2.6%)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89~93년 기간중에는 17.8% 상승하여 여타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같은 고율의 임금인상은 우리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의복과 신발을 비롯한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부진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자료 : 경 총

[그림 5] 경쟁국과 임금상승률 비교(제조업)

- 한편 월평균 제조업의 임금수준(US\$기준) 변화 추이를 경쟁국과 비교해보면, 86년에는 334달러로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뒤진 것은 물론 일본(1,810달러)의 약 1/6 수준에 불과했으나, 93년에는 1,105달러로 대만, 홍콩에 비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3,201달러)의 약 1/3로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음.
- 에 비해 중국은 86년 32달러에서 93년에는 47달러로 89년 1/10에서 93년에는 1/20으로 격차가 확대 되었음.
- 1인당 GNP대비 임금수준을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1.78로 홍콩(0.62), 싱가포르(0.7)은 물론 일본(1.18), 중국(1.23), 대만(1.25)보다도 월등히 높아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타 생산요소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음.

[표 5] 경쟁국과 GNP대비 임금수준(1993년, 제조업)

(단위 : US\$)

구 분	임금수준(A)	1인당GNP(B)	(A/B)×12
한 국	1,105	7,466	1.78
대 만	1,099	10,566	1.25
홍 콩	956 ¹⁾	18,521 ²⁾	0.62
싱 가 폴	1,134	19,432	0.70
일 본	3,321	33,839	1.18
중 국	47	460	1.23

주) : 1) 홍콩임금은 1~9월임.

2) GDP 기준임.

자료 : 경 총

- 임금이 아무리 높게 인상된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증가가 이를 뒷받침 할 경우, 기업으로서의 임금인상이 큰 부담이 되지 않게됨.

2. 최근 노동동향

[1] 개 황

- 최근 노동운동이 합리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노동운동의 기초와 주도권을 둘러싼 노동계

내부의 선명성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내부적인 요인 보다 외부영향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9.27 지자제 선거에 따른 정치, 사회적 이완 분위기를 이용하여 공공부문 노조, 민주노총(준), 조선노협 등 법외 노동단체들은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노동법개정투쟁, 사회개혁투쟁 등을 내걸고 임금교섭 기간 중 이들 법외 노동단체들의 조직적인 제3자개입 등 소위 민주노조 진영의 공동, 연대투쟁 전략을 구체화 시키고 있음.
- 민주노총(준) 및 산업별연맹 건설작업에 주요사 노동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동계 내부에서의 입지 강화를 겨냥한 현총련, 대노협 등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활발한 투쟁활동과 함께 민주노총(준)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종별·지역별·그룹별 임·단투 및 연대투쟁에 보조를 맞추고 있어 어느해 보다도 외부세력과의 공동·연대투쟁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2] 최근 쟁의발생신고 동향

- 최근 자동차, 조선업종에 속한 대기업 노조와 일부 공공기관이 재야노동계와 연계하여 6월 1일을 전후하여 쟁의발생신고를 집중시키고 있으며, 한국통신의 분규에 이어 서울 지하철 노조도 쟁의 신고를 함으로써 6.15일 이후에는 동시다발적인 쟁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집중적인 쟁의신고는 민노준, 공노대, 현총련 등 법외노동단체의 지침하에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재야노동계가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연대투쟁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짐.

[3] 노동운동권 동향

- '95 임·단투와 사회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95. 10월 민주노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노준 진영은 상반기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야만 한다는 판단 아래 쟁의 시기 집중을 통한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실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 당초에는 지자제 선거로 인하여 국민적 관심이 선거판으로 분산되기 이전인 5월말~6월초에 전국적으로 임투를 집중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투쟁 중심사업장(한국통신, 현총련, 조선노협 등)의 쟁의 가능시기에 맞추어 6월 중순으로 시기를 집중하는 것으로 변경함.
- 이에 따라 전국적인 시기집중을 통한 투쟁결합의 선도역할을 담당할 부문·업종·그룹별로 투쟁중심 사업장의 선정과 함께 개별기업별 임·단협 교섭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공동투쟁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민주노총(준)은 제2노총 건설의 합법성 쟁취를 위해서는 현행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는 노동법 개정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제3자개입 금지조항 등 '노동악법 조항 안 지키기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노동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전국연합, 국민회의 등 재야단체는 민주노총(준) 건설이 향후 전국 운영에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 민주노총 건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주노총(준)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재야세력을 재집결 시키려는 계기로 삼고 있음.

[4] 노사화합 결의 확산

-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그동안의 노사분규 경험을 토대로 대립과 투쟁 보다는 타협과 협력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조성되어 왔으며 정부도 세계화를 위하여는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확립에 노력하였음.

- 노사협력 선언은 작년에 동국제강등 10여개사가 행하였으나 금년에는 고려제강을 필두로 시작된 노사협력 결의대회는 인천, 경인지역 120여개 업체 및 원주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3.30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95산 업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흐름을 자리잡게 되고 이후 대전, 대구, 여수 등지로 확산되어 '95. 4. 20일 현재 819개 업체에서 총 21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참가 하였습.
- 그동안 대부분 중소기업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점차 대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중심이 되어 전자, 철강업종이 가세하고 있으며 행사내용이 무과업 등 노사협력 결의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평화 및 세계화 염원의 성화봉송(현대전자), 노조의 임금 4.8% 인상요구 및 회사의 현장수용(동국제강)이 있었으며, 참여방법도 협력업체 노사공동 참여(대우전자, 포철 광양제철소), 노사정 연찬회 후 공동결의(광주, 수원) 등으로 다양화 되어 가고 있음.
- 4.19 LG전자에서 노경현장이 선포되었으며 임금 6.2%인상 합의로 향후 주요 기업에서도 이 같은 유사한 노사협력문이 계속나올 것으로 전망됨.
- '95. 3. 30 노.경총간에 이루어진 "95 산 업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정신을 계승한 노사화합 결의대회가 '95. 6. 9현재 전국적으로 1,920개 업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노사안정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노사화합 결의대회는 확산 될 것으로 보임.

[5]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 노.사간의 자율교섭에 의한 임금안정 분위기를 조성을 위하여, 지난 2년간의 "노·경총 합

'95 노사화합 결의대회 현황

('95. 6. 9현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920 (309,238)	770 (67,481)	56 (21,409)	358 (85,239)	529 (96,963)	95 (26,175)	109 (11,972)

주) ()는 근로자수임.

자료 : 경총

의"의 실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올해에도 노사합의 도출을 유도 했으나, 노총의 협조 거부로 이의 실현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독자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한편, 노사관계 안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조성을 위하여 주요 대기업 및 노조를 대상으로 "산업평화 선언"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

- 특히 올해 들어 노사관계의 태풍의 눈으로 부각된 공공부문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부문 노사화합 지원협의회"를 통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노사분규 예방을 위하여 노사 공히 불법행위에 대한 문책 및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고 있음.
- 그러나 현정부 출범 이후 계속적으로 야기된 노동정책의 불확실성과 6월 27일 지자체 선거를 앞둔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이러한 노동정책과 단호한 의지가 구체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노사자율 이외에는 뚜렷한 정책이 없는 가운데 올해의 노사관계가 전개될 전망이다.

[6] 업종별 노련의 공동교섭 추진배경

- 민노준 산하의 업종별 노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위노조로 부터 교섭권을 위임 받아 공동 교섭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와 사용자의 임금정책과 노조활동에 대

- 한 규제강화에 공동 대응
- 과거의 다양한 공동투쟁이 조직화의 실패로 기대효과를 거둔바 없으므로 공동교섭의 한계를 극복함.
- 공동투쟁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사회개혁 노력을 구체화 함.
-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통해 기업별 노조체제를 극복하고 산별체제를 이룩함.

단위노조의 교섭권 위임현황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총14개 병원노조가 교섭권 위임)
(경희대병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고려대병원, 이화여대병원, 서울중앙대병원, 원자력병원, 인제대병원, 백병원, 건국대민중병원, 방지거병원, 서울기독병원, 청구성심병원, 청량리병원, 을지병원 등)
-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총25개 노조가 교섭권 위임)
(한국생산성본부, 서울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청주상공회의소, 대한염업조합, 산업기술진흥협회, 홀드아동복지회 등)
-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총17개 노조가 교섭권 위임)
(삼부토건, 삼환기업, 벽산건설개발, 국제건설, 라이프, 한신, 삼환까뮤, 공영토건, 대우건설, 부산도시개발, 자원공영, 진흥기업, 한양, 벽산사무, 동아건설산업, 우성, 한성노조 등)
- 그 외에 전국사무노동조합산하 카드사노조협의회(6개가노조), 증권노조협의회(25개사노조), 생명보험노조협의회(17개노조)등이 공동교섭을 시도하고 있음.

[7] 최근 제조업의 임금동향(통상산업부)

- 지난해 제조업은 90년이후 가장 높은 10.4% 성장을 기록하여 전체 경제성장을 주

도 하였으며 제조업내에서도 기술자본 집약적인 기계·전자·자동차등이 19%내외의 고 성장을 보이는 등 제조업의 구조고도화가 더욱 진전됨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이러한 제조업 주도의 성장기반 확충은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그동안 추진된 민간의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80년대 후반에 나타난 높은 임금인상과 노사분규가 자제되면서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지난해 성장활력이 회복된 큰 요인임.
- 그러나 아직도 우리 경제는 경쟁국과 비교할 때 임금상승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제조업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15.5%로 일본 2.3%, 대만 8.6%에 비해 높게 나타나 90년이후 임금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명목임금상승률의 국제비교

(제조업, %)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1990	20.2	2.8	5.2	12.7
1991	16.9	3.0	3.4	10.5
1992	15.7	2.9	1.2	9.8
1993	10.9	3.8	0.0	6.9
1994	15.5	3.5	2.3	8.6
평 균	15.8	3.2	2.4	9.7

주) 94년 미국, 일본, 대만은 1~9월 평균임금지수의 전년도 평균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95. 1)

- 한편, 노동비용 증가율을 보면 생산율이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임금상승으로 지난해 7.1% 증가 하였음

에 비해 미국과 일본은 각각 1.2%, 2.1% 감소하고 대만은 4.6% 증가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노동 경쟁력이 크게 낙후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국제비교
(물적생산성, 제조업, %)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1990	12.5	2.5	3.9	9.0
1991	13.9	2.0	2.5	11.1
1992	10.5	4.3	△3.4	4.8
1993	8.0	3.6	△1.6	3.4
1994.3/4	8.4	4.7	4.4	4.0
평 균	10.7	3.4	1.2	6.5

주) 94년 미국, 대만은 2/4분기 증가율의 전년도 평균 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95. 1)

- 94년 노동비용 증가율(명목임금증가율-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경쟁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국제비교
(제조업, %)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1990	7.7	0.3	1.3	9.0
1991	3.0	1.0	0.9	11.1
1992	5.2	△1.4	4.6	4.8
1993	2.9	0.2	1.6	3.4
1994	7.1	△1.2	△2.1	4.6
평 균	5.8	△0.2	1.3	6.5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95. 1)

- WTO출범 등 무한 경쟁시대에 있어 기술, 임금, 물류 등 모든면에 있어서 기업의 절대우

위가 확보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도 노사협력과 임금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 특히, 엔고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금년에도 임금안정 및 노사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정부가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 5.6~8.6%가 준수될 수 있도록 주요 70개 기업을 선정하여 노사협력을 집중 지원하며 업종별 단체주관으로 노·사·정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 동 계획의 일환으로 박운서 통산부 차관은 '95. 3. 28(화) 10:00 주요 업종별 단체 및 산하기관 회의를 주재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박운서 차관은 세계화 추진을 위한 임금안정 및 노사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당부하였슴.

특히, 박운서 차관은 업종별 노사화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노·사·정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선진국의 노사화합 및 생산성향상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 하는 한편, 고려제강·현대전자 등과 같이 노사화합을 위한 전진대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산업현장에서 100PPM운동과 같은 품질혁신과 생산성향상 분위기 확산

구 분	한 국		미국('92)	일본('92)	대만('92)
	'93	'94			
파업일수					
총근로일수	1,308	1,484	3,986	231	14
대비(%)	0.09	0.10	0.01	0.02	0.0004

주) 싱가포르의 파업일수가 없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

- 또한, 통상산업부 산하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도 생산성 향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토록 하는 원칙하에 정부투자기관은 4.7%~5.7%, 출연기관은 6.0%이내 수준에서 4월 이전까지 임금교섭을 마무리 지을 것을 당부 하였습.
- 총 근로일수에 대비한 노사분규 파업일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3. 국제노동동향

[1] ILO협약준비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적극적 대응차원에서 제19호 재해보상에 있어 내외국인 평등대우에 관한 협약, 제45호 광산의 갱내 여자고용에 관한 협약,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등 모두 ILO 협약 3개를 더 연내 비준할 방침이다. 이로써 우리정부는 지난 '91. 12. 9 ILO에 가입한 이래 7개의 협약을 비준하는 셈인데 그동안 정부는 '92. 12. 제73호 선원건강진단 협약, 제81호 근로감독 협약, 제122호 고용정책 협약 및 '94. 1. 인적자원개발 협약 등을 비준한 바 있다. 한편 ILO협약은 현장과 더불어 국제 노동기준의 최고 법원으로서 당해 국가는 비준을 통하여 비로서 법적준수 의무를 지게 되며 국제 노동기구에 부러 감시, 감독을 받게 된다.

[2] 북구 4개국 복지정책 축소

최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 4개국은 실업 가족수당을 삭감하고 병가보상비를 축소하는 등의 복지관련 정책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들 북구 4개국이 이렇듯 복지정책을 축소하게 된 배경으로는 전후 대다수 유럽국가들이 완전고용정책과 소득 재분배정책 등을 통한 이상적 복지국가 달성을 최대의 과제로 추

구해 왔으나 90년대 초부터 유럽 경기침체 여파로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사회보장비용의 증가에 따른 과도한 재정지출이 경기 악화의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찍부터 복지제도가 정착되었던 북구 4개국이 중심이 되자 복지지출 삭감을 통한 경기활성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3] 중국의 실업확대 동향

최근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의 개혁이 본격화되고 농촌의 잉여노동력으로 인한 이농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2000년에는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고 1980년대까지 중국은 연 9%의 고도성장과 농촌 민간기업 등의 증가에 힘입어 고용이 급증하였고 실업률도 2%이내에서 안정국면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국영기업개혁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규모 감원이 실시되고, 도시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농촌 지역 1억 1천만명의 잉여노동력의 도시유입이 급증하여 도시지역의 실업난이 가중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94년말 현재 중국의 도시 실업률이 2.7%로 추정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인원(2천여만명)과 농촌 잉여노동력을 포함시킬 경우,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3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4] ILO95년 '세계 고용보고서' 발표

국제노동기구(ILO)는 2월 22일 '세계 고용 보고서'를 발표, 전세계적인 실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세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발전 정상회의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력의 30%인 8억 2천만명이 실업이나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으며, 이는 30년대의 대공황 이래 최악의 실업위기라고 경고하고 있다.

[5] '사회발전 정상회의'와 노동문제

(사용자단체 고용증진을 위해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 촉구)

121개국 정상들을 포함한 세계 193개국 정부 대표 1만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발전정상회의'가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에 장애가 되는 인구증가, 빈곤, 실업, 사회 소외계층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 관심과 국제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각국의 공통된 인식 위에 지난 92년 지구환경에 관한 리우 정상회의 이후 3년만에 개최된 범세계적인 정상회의였다.

[6] 일본 기업내 능력급 제도 도입 본격화

근래 일본기업들은 능력급 비용 제고와 연봉제 도입 등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업무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능력급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능력급제 지향의 추세에 따라 닛산자동차는 96년 4월까지 일반 사원의 임금체계를 현재의 연공서열 위주에서 능력, 실적 중시체제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한편 연봉제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혼다 기연공업은 92년 6월부터 관리직으로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한 이래 현재 전체사원의 약 10%인 4,500명에게 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야마이치 증권은 대형 증권회사로는 최초로 오는 4월부터 연공급의 단계적 폐지와 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급여체제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본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능력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WTO 출범 등에 따른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일층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래의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인 임금체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7]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논의 활발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제국에서는 국제적 노동기준을 모든 국가들이 준수하기 위해 노동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문제를 국제무역기구(WT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적극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아동, 최소년노동금지, 노조결성권, 단체교섭권 보장 등 ILO가 정하는 최소한의 기본노동권을 주장하면서 자유경쟁과 자유무역을 추구해야하며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문제가 ILO, WTO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입장아래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이사회회의지침을 채택(94. 6.), 각 회원국에서 이를 96년 2월까지 입법, 시행토록 권고한데 이어, 최근 EU 사회장관 이사회회의에서는 의장국인 프랑스가 작성한 각서를 기초로 무역, 노동 연계 문제를 집중논의 하였으며 향후 일반이사회에서 공식입장을 도출할 예정이다. 미국은 개도국들의 반대로 마라캐쉬 각료선언문(94. 4.)에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조항을 삽입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WTO내에서 동 문제를 논의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최근 한센 ILO 사무총장은 WTO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 노동기준을 제정, WTO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역협정에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조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하고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등과 협조하여 이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도국이 모든국가에 동일한 노동규정 적용은 저렴한 임금 등 개도국의 경쟁우위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역협정에 사회적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구체화되기 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자료제공 : 한국경제단체협의회)